

尹, 대통령실 ‘정책실장직’ 신설 협의·조정 강화로 정책추진 속도

대통령실, 3실·5수석 체제 개편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관장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이행과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실장’을 신설키로 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승진 기용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직을 신설하기로 하고, 신임 정책실장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을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김 수석은 “정책실장직 신설은 내각 및 당과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경제 정책을 밀도 있게 점검해서 국민의 민생을 살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실장은 부처 정책을 총괄 조율하고 여당과 협의 및 조정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를 맡게 된다.



이관섭 정책실장

신설된 정책실장실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을 관장하며, 향후 구성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도 정책실장 소속으로 두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정기획수석 소관인 국정기획·정책조정·국정과제·국정홍보·국정메시지비서관실은 정책실장 직속으로 남게 된다.

정책실장 운영에 따라 현재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6수석(국정기획·정무·시민사회·홍보·경제·

사회)’ 체제에서 3실·5수석 체제로 개편된다.

다만, 조만간 발표할 대통령실 개편에서는 신설될 과학기술수석실의 구체적인 인사와 조직 구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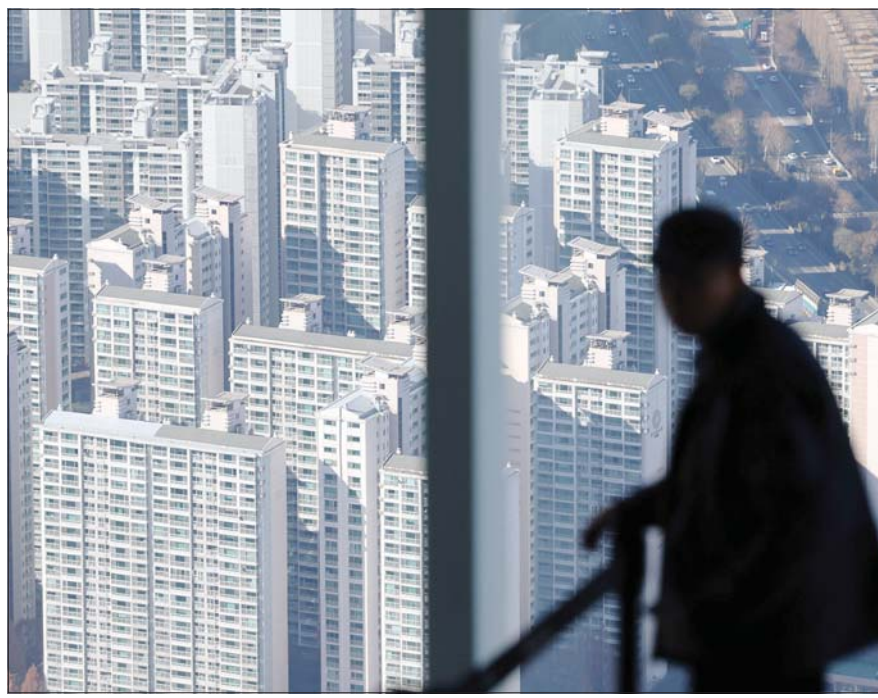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며 “그럼에도 가급적 연내, 연초에는 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실장은 이명박·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있었지만, ‘작은 대통령실’을 표방했던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지난해 5월 취임과 함께 폐지됐다.

1년 6개월 만에 윤석열 정부 정책실장이 신설되면서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나서면서 총선을 앞두고 수석비서관급 인사 등 ‘대통령실 2기 체제’를 위한 인사개편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올 중부세 고지 인원·금액 급감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라인에서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주택분과 토지분 등 총 중부세 고지 인원과 금액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82㎡ 기준 중부세는 전년도 445만원에서 올해 59만원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뉴시스

기업 설비투자 전담팀 구성·밀착지원

산업부, 10대 제조업 투자 간담회
규제 완화·세제지원 확대 등 건의

정부가 내년부터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에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특히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혜택 확대 등 지원 방안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10대 제조업 주요 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설비투자 활성화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당초 계획 대비 미흡한 상황이다. 산업부가 연초 제시한 10대 제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계획을 점검한 결과, 3분기 누적 이행률은 약 66% 수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그간 킬러 규제 혁파,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해왔으나, 글로벌 고금리, 불확실성 증가 등 투자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업의 설비투자 이행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역

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설비투자를 일부 보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올해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3분기 누적 239억달러다. 이는 2020년 3분기 129억달러, 2021년 3분기 182억달러, 2022년 3분기 215억달러에 이어 증가 추세로 올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상회와 주요 기업들은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세제·금융 지원 확대 등을 집중 건의했다. 특히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 연장, 정책금융 확대 등은 여러 업종에서 공통적으로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들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그 결과를 업계와 공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내년에도 기업들의 지속적 인 투자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활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대 제조업의 설비투자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업종별 핵심 투자 프로젝트는 ‘전담팀’을 구성해 밀착 지원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10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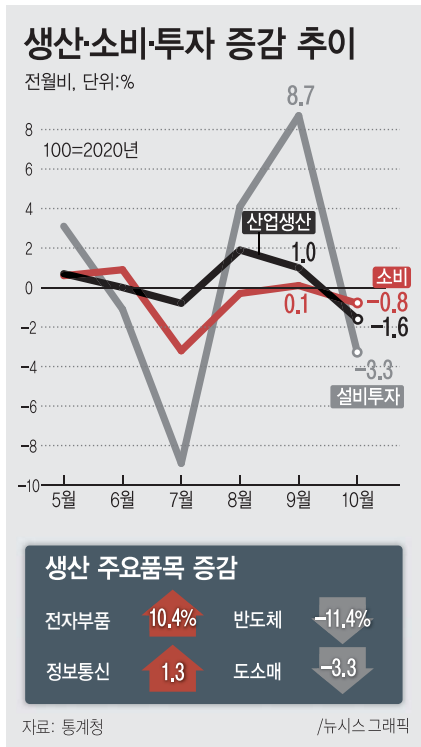
통계청, 생산 1.6%↓… 감소 전환
반도체 -11.4%, 기계장비 -8.3% 등
소비 0.8% 줄어… 비내구재 -3.1%

지난달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 들었다. 특히 전(全)산업 생산은 42개월 사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떨어지는 이른바 ‘트리플 감소’가 올해 들어서만 세 번(1, 7, 10월) 나타났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은 전월에 비해 1.6%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올해 8월(1.9%)과 9월(1.0%) 두 달째 증가세를 보이다 10월에 다시 감소로 돌아섰다.

전산업 생산은 8, 9월에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10월에는 기저효과가 나타났다. 게다가 임시공휴일 등 조업일수가 줄면서 2020년 4월(-1.8%) 이후 감소폭이 42개월 만에 최대에 달했다.

산업생산 가운데 제조업의 경우 반도체(-11.4%)가 감소가 두드러졌다.



또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많이 감소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과 9월(12.8%)에 두 자릿수로 증가를 나타내다 지난달 다시 감소했다. 감소폭이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통계청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과 출하가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분기 초에는 반대 효과로 감소하는 모습”이라며 “나머지 업종은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이 크다”라고 밝혔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p) 올랐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를 기록했다. 도소매가 -3.3%, 금융·보험이 -1.2% 등이다. 반면 정보통신(1.3%)과 예술·스포츠·여가(4.2%) 등의 부문에서 늘었다.

소비(소매판매)도 전월에 비해 0.8% 줄었다. 소매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에 잠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의복등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이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감소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연간 7만가구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국토부, 2세 이하 자녀가구 대상

정부가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으로 연간 7만 가구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의 소득 기준은 월 평균 소득 200%까지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과 8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연 3만 가구) 등 7만 가구를 공급한다.

맞벌이 기준도 완화한다.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 평균 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유형별 10%)를 신설한다.

/김대환 기자 kdh@

금 가격 온스당 최대 2300달러 갈수도

>> 1면 ‘美 금리인하 기대감’서 계속

30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시장에서 예측한 연준이 내년 3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47.9%였으며, 6월 이전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93.1%에 달했다.

시장에서 내년 상반기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확실시하는 만큼, 달러 약세와 금 가격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 가격이 역대 최고 가격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역대 최고 금 가격은 지난 2020년 10월 기록한 온스당 2074.88 달러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금의 광채가 돌아오고 있다’며 금의 12개월 목표 가격을 온스당 2000달러에서 20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위즈덤트리도 이달 초 금 가격이 내년 3분기 이전에 온스당 209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냈다. 이어 금 가격의 강세(Bull case)가 이어질 경우 최대 온스당 23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금 가격이 온스당 2500달러를 상회할지는 불투명하지만, 달러 약세 기대감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지원 등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국의 미 국제 매도와 달러 매수 현상도 금 가격의 강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231@